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을 발간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35개 공기업들이 모여 발족한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에서, 그 첫 번째 작업으로 <공기업 청렴경영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는 각 회원사들의 청렴경영 성공사례는 물론 실패사례까지도 수록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동일 유형의 실패를 예방하고 청렴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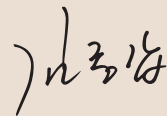
앞으로도 '공기업 청렴사회협의'는 각 기관별 사례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기업 공동의 청렴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례집이 우리나라 청렴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일반 국민들께도 널리 읽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사례집 발간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의장 김 종 갑



추천사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 발간을 축하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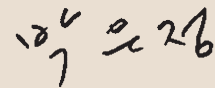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공기업 분야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의 첫 번째 성과물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을 위시한 사회각계의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로서 기업의 윤리경영 및 그 실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가 이번에 발간하는 이 사례집에는 합법성을 의미하는 '준법경영'을 넘어 공정성과 책임성까지 포괄하는 '청렴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공기업의 우수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특히 실패사례도 함께 수록하는 용기를 통해 그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모든 공기업에, 그리고 더 나아가 유사한 경영체계로 운영되는 민간기업에도 공유되어 청렴경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우수한 제도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요 사례는 기업 윤리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월간지인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통해 널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례집 발간이라는 결실을 거두신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김종갑 의장님과 회원님들을 비롯하여 회원사 실무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

CONTENTS

제1장 성공사례

모니터링 강화

1.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7
2. 내부 인허가시스템 대국민 전면공개 ·8
3. 법정부담금 반환금지금 결정 심의위원회 도입 ·9
4. 국민참여 품질평가단 운영 및 정보공개 강화 ·10
5.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실시간 공개 ·11
6. 연구논문 표절검증시스템 운영 ·12
7.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모니터링 강화 ·13

투명성 강화

[인사 분야]

8. 「채용 감사관리시스템」 도입 ·15
9. 인사 옴부즈만 제도 시행 ·16
10. 인사채용비리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17
11. 정규직 채용 공정성 확보 프로세스 강화 ·18
12. 청렴시스템을 적용한 채용제도 확립 ·19

[계약 분야]

13. 면식관계 형성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이력시스템」 도입 ·21
14. 구매계약 체결정보 실시간 공개 ·22
15. 제안서 평가시 시민참여단 참관제도 도입 ·23
16. 납품업체 이의제기 시 검수책임자 변경제도 신설 ·24
17. 감리인 비리 예방을 위한 계약조건 강화 ·25
18. 용역계약서 갑질관련 조항 개선 ·26
19. 수의계약 품목의 경쟁입찰 전환 확대 ·27

[기타 분야]

20. 익명신고자 보상제도 신설 ·29
21. 「기술마켓」 제도 도입으로 신기술 채택 투명화 ·30
22. 법인형 「카셰어링(Car-Sharing)」 제도 도입 ·31
23. 홍보성 물품 관리시스템 도입 ·32

제2장 실패사례

건제장치 미흡

1.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불법 승인·52
2. 단기계약근로자 근태 허위기록 및 임금 과다지급·53
3. 거래처에 회사 공인인증서 무단유출·54
4. 응급관리료 임의 취소 및 횡령·55
5. 사내 사회공헌활동기금 횡령·56
6. 소액물품구매제도 악용 허위 물품구매 및 횡령·57
7. 정보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데이터 변조·58

청렴문화 확산

[대내 분야]

24. 정년임박 직원 활용 「클린마스터」 제도 도입·34
25. 부패사건 재판참관제도 시행·35
26. 「맞춤형 청렴체험 몰입교육」 시행·36
27. 「청렴아이」 선발·운영으로 청렴문화 확산·37
28. 전사 청렴실천단 구성·운영·38
29. 사업소 청렴지킴이, 준(準)감사인 제도 도입·39
30. 감사준비금 지급제도 도입·40
31. 청렴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41
32. 부당업무지시 사례집 발간·42
33. 간부급 도덕성 검증·청렴사직 서약 실시·43

[대외 분야]

34. 우수협력사 선정 시 청렴성 평가 도입·45
35. 협력회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46
36. 반부패 청렴 ACADEMY 투어 운영·47
37. 청렴콘텐츠 공모대회 개최·48
38.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서약실 운영·49
39. 직무관련자 청렴식권 제도 운영·50

모니터링 부실

8. 안전관리비 증빙 확인절차 미흡·60
9. 간부승진시험 자격서류 위변조·61
10. 단시간근로 무기계약직 채용기준 부재·62
11. 업무 세부기준 부재로 위험수당 부당수령·63
12. 출산장려금 관리시스템 부재로 중복지급·64
13. 해외출자회사 비용집행 규정 및 관리 미흡·65
14. 휴면계좌 해지 소홀로 인한 잔액 방치·66
15. 발명 기여율 임의 기재로 보상금 부당수령·67

제도 부작용 발생

16. 자체청렴도 내부평가 경쟁 과열·69
17. 법인카드 부정사용방지 대책 미흡·70
18. 건설현장 식당 선정 시 발주처 이권 개입·71
19. 직무관련자 접촉 자율신고제 운영 미흡·72
20. 반부패시민감시단 제도 폐지·73

■ 공기업 청렴사회협약·76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81

성공 사례

● 제1장 성공사례

모니터링 강화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부서별 법인카드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부적정 사용 의심건에 대해 사용부서에 실시간 소명 요청”

추진 배경

- 2015년 전사 법인카드 사용실태 내부감사 결과 **부적정사례 다수** 발견
- 법인카드 부적정사용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지속
- “○○, 클린카드로 술집서 평평...”(2016.8. 언론보도)

개선 내용

-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부서별 법인카드 집행내역 **분기별 비교분석 및 분석결과 제공**
- 전년/전분기 대비 증감내역, 전사 집행금액 상위그룹 등
 - **부적정 사용 의심건 자동추출** 및 사용부서에 **실시간 소명요청**
- 추출 대상: 원거리/휴일/50만원이상 사용 등 8개 시나리오 해당시

기대 효과

- 소속부서 법인카드 사용수준 파악을 통한 **예산절감 유도**
- 상시모니터링 도입이후 전사 연간 법인카드 사용금액 약 15% 감소
- 법인카드 **부적정사용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올바른 법인카드 사용 유도

국립공원공단

내부 인허가시스템 대국민 전면공개

“내부 인허가시스템 외부인 공개로
국민 알권리 충족 및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

추진 배경

- 인허가신청 불허 시 사유 미공개로 신청인의 의심 및 민원제기 지속
- 기존의 인허가시스템은 내부의 업무담당자만 접속 가능, 국민 알권리 충족 필요

개선 내용

- 외부인 열람 신청 시 인허가시스템 전면공개
 - 21개 국립공원에 대한 세부정보(용도지구, 고시도면 등) 일체 제공
 - 인허가 결과(불허 사유 등) 공개

기대 효과

-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 불허 건수 기존대비 53.8% 감소
- 인허가 결과에 대한 신청인 수용성 제고 및 민원 감소
 - 불허 관련 민원 39.1% 감소

법정부담금 반환금지급 결정 심의위원회 도입

“법정부담금 이의신청시 반환여부를 담당자 1인의 검토에 의존하다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개선”

추진 배경

-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등 법정부담금 부과지 후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및 착오납부 등으로 인해 **반환금 지급이 빈번**하게 발생
- 법정부담금 반환금 지급 결정시 **담당자의 주관적 검토**에 의해 결정

개선 내용

- 반환금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신규 설치 및 운영

구분	기존	개선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등 접수	• 이의신청서 등 접수 • 심의위원회 안건 부의
검토	• 이의신청서 등 검토(담당자)	• 이의신청 안건 심의(심의위원회)
반환통보	• 내부보고(부서장 전결)	• 심의결과 보고 및 결재

기대 효과

- 반환금 지급 타당성 및 적합성 등 **심의의결 객관성 확보**
- 부당반환 사전예방으로 **국가재정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한국도로공사

국민참여 품질평가단 운영 및 정보공개 강화

“고속도로 건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국민참여 품질평가단 운영 및 정보공개 대상 확대”

추진 배경

-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년도에 예산편성이 집중되며, 준공기한 준수를 위한 무리한 공정으로 **시공품질 저하** 및 **부패개연성 상존**
- 고속도로 **건설 비리**로 인한 **부실시공** 사례 빈번
- ‘△△공사 직원, 설계변경해주고 뒷돈 요구’(2018.10. 언론보도)

개선 내용

- 고속도로 개통 시 자체평가 외 **국민참여 품질평가단 운영제도** 도입
- 본선 및 출입시설 구간 시험주행 후 건설 시공품질 평가
- 언론사 기자단 대상 **정보공개 절차 의무화** (설계변경 등 주요 정보)

기대 효과

- 국민참여 품질평가단 **최초 도입**으로 **고속도로 건설 시공품질 제고**
-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행정 투명성 제고로 **부실시공 및 부패 예방**

국립공원공단

성공

05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실시간 공개

“성수기 국립공원 예약자 선정과정을 Social media를 통하여 실시간 생중계하고 예약부도자에 대해 국립공원 시설물 이용제한 기준 마련”

추진 배경

- 국립공원 이용 예약자 선정과정에 대한 불신·불만 민원 증가
- 예약부도(노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쇼에 의한 피해자 발생

개선 내용

- 성수기 국립공원 이용 예약자 선정과정을 Social media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 **예약부도자에 대한 국립공원 시설물 이용제한 기준 마련**
- 1회 노쇼(1개월 이용 불가), 2회 노쇼(3개월 이용 불가)

기대 효과

- 추첨제에 대한 불신·불만 민원 기존대비 **93.8%** 감소
- 노쇼 등 예약부도율 기존대비 **43.1%** 감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논문 표절검증시스템 운영

“연구논문 심의시 논문작성자 주관의 사전 표절검사 절차 의무화”

추진 배경

-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논문표절에 대한 **사전예방체제 구축** 필요성 제기

개선 내용

- 연구논문 심사시 논문작성자의 **표절검사확인서 첨부 의무화**
- 확인서 내 **표절검사 프로그램 실행결과** 첨부
 - 영어논문 : iThenticate 프로그램* 활용
 - 한글논문 : Copy killer 프로그램* 활용

* 연구논문 표절 여부 판정이 가능한 상용 소프트웨어

기대 효과

- 표절 사전 예방체제 구축을 통한 **연구자 윤리의식 강화**

대한적십자사

성공

07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모니터링 강화

“봉사활동 증명서 허위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발급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봉사자의 봉사활동 인정시 3중 확인절차 신설”

추진 배경

- 당사 주관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2017년 기준 연인원 190만명에 달하며 **지속적 증가추세**
- 봉사활동 실적이 취업, 학점이수에 도움이 됨에 따라 **허위 증명서 발급 증가**

개선 내용

- 기존 수기로 운영하던 증명서발급대장을 폐지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 봉사활동 인정시 ‘현장근무자 - 현장책임자 - 담당부서장’의 **3중 확인 절차 신설**
- 봉사활동 **현장점검 강화** (특정감사, 청렴시민감사관 등 활용)

기대 효과

- 봉사활동 신청, 승인, 확인절차 등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부패행위 원천 차단**

성공 사례

● 제1장 성공사례

투명성 강화_ 인사 분야

한국가스공사

성공

08

「채용 감사관리시스템」 도입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 전단계에 걸쳐 감사부서가 내부감사를 시행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채용 공정성 확보”

추진 배경

-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생에 따른 국민 신뢰도 하락
- 지속적인 신규채용 수요 확대에 따른 투명한 채용관리 시스템 필요성 증가

개선 내용

- 채용 감사관리시스템(KOHAS, KOgas Hiring process internal Audit System) 도입
- 채용계획수립, 모집공고, 서류심사, 면접,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등 모든 채용전형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및 감사부서의 점검 실시

기대 효과

- 채용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감사부서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채용비리 사전예방

한국수력원자력

09 인사 옴부즈만 제도 시행

“사외위원이 인사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조치결과를 검증하는
인사옴부즈만 제도 시행”

추진 배경

- 승격, 보직 등 인사업무 관련 비정상 사례 **지속 발생**
- 비정상 사례 발생 시 **인사부서 독단적 처리**로 직원들의 불만 증가

개선 내용

- 인사 비정상사례 접수 및 처리결과 검증을 위해 **외부위원** 및 **사내 전담조직**으로 구성된 ‘인사옴부즈만’ 제도 신설
 - 인사 비정상사례 제보접수를 위한 ‘옴부즈만 시스템’ 설치
 - 제보사항에 대한 인사부서 제도개선 결과 및 감사부서 조사결과 검증
 - 월 1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CEO 보고

기대 효과

- 부패 취약분야인 인사분야에 대해 신고자 제보 접수단계 및 사후 검증시 외부 옴부즈만을 활용하여 **청렴성 대폭 강화**
- 인사 비정상 사례 검증 및 엄벌을 통한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정착**

한국중부발전

성공

10

인사채용비리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인사 채용비리 건으로 신고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분에 이른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 지급”

추진 배경

-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채용비리 적발을 위한 임직원 및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개선 내용

- 채용비리 관련 내·외부 신고사례 중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분 또는 판결된 건에 한하여 500만원 포상금 지급제도 마련
-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내용 전 직원 교육, 인터넷 기사홍보 및 배너설치

기대 효과

- 채용비리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발적인 비리근절 활동 유도
- 공공기관의 채용 투명성 확보노력 홍보로 국민의 기대수준 충족

한국마사회

정규직 채용 공정성 확보 프로세스 강화

“채용단계별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및 지원자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채용공정성 강화”

추진 배경

-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추진
- 채용비리 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

개선 내용

- 채용단계별 부패유발요인 개선

구분	현행 및 취약점	개선
지원서 작성	• 입사지원서상의 학력 등 간접노출 가능성 존재	• 지원자 정보수집 최소화 (교육기관 등 수집정보 제외)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여부만 발표	• 필기시험 점수까지 공개(요청시)
면접심사 (1차·2차)	• 2차 면접부터 외부위원 참여	• 1차 면접부터 외부위원 참여 • 면접위원 대상 이해관계 검증 강화 및 사전교육 시행

- 채용콜센터 도입 및 Social Media를 통한 지원자와의 **소통 활성화**

기대 효과

- 채용지원자의 **채용공정성 인식 및 만족도 제고**(’17년 91.5→’18년 92.4)
- 고용노동부 점검(’18.4월) 및 상급기관 채용감사(’19.11월) **지적사항 ZERO**

(주)강원랜드

성공

12

청렴시스템을 적용한 채용제도 확립

“채용제도 전면 개선으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

추진 배경

- 2000년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부정청탁 비리행위 발생
-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국민의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요구

개선 내용

- **채용제도 전반에 걸쳐 청렴시스템 도입**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용상담창구 개설** 및 **특별채용** 실시
 - 채용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채용제도 전면 개정 및 규정 강화
 - 채용전형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및 **외부심사위원 참여** 필수(50% 이상)
 - 채용비리 근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 아이디어 제도화
 - 권익위,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38건 접수('18. 8월)
 - 부정 입사 발견 즉시 **채용 취소**가 가능한 근거 제도 마련
 - 입사 지원자에게 필기전형 시 '채용취소 동의서' 징구 의무화

기대 효과

- 채용시 부정 청탁 등 비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청렴 인사제도 구축**
- 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선도적인 후속조치 시행**(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워크숍 및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우수사례 발표

성공 사례

● 제1장 성공사례

투명성 강화_ 계약 분야

서울시설공단

성공

13

면식관계 형성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이력 시스템」 도입

“공사감독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DB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감독자가 동일한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과 면식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

추진 배경

- 공사감독자의 봐주기식 업무처리 등으로 **시공사와의 비리** 발생 개연성 상존
 - 2000년 공사감독이 시공사로부터 현금 00만원 수수 비리 발생

개선 내용

- 공사감독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DB 시스템 구축
 - 공사감독자가 동일한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과 동시 또는 연속하여 업무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

기대 효과

- 공사감독 분야 **비리발생 최소화**
- 공공행정 부패 방지 **모범사례**로 선정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공사감독 이력시스템’ 탑재
 - 베트남, 요르단 등 7개국에 자문 시행으로 국제사회에 청렴경쟁력 홍보

성공

14

한전KPS

구매계약 체결정보 실시간 공개

“구매계약 체결정보를 소속사업장 전체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계약 투명성 제고”

추진 배경

-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 특혜제공 등 **계약분야 부패** 상존
- 계약방법, 계약업체 등 계약체결 정보는 **계약업무 담당직원만** 인지

개선 내용

- 소속 사업장 내 전 직원 대상으로 **구매계약 체결 정보 공개**
- 계약체결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사내전산망에 공개

기대 효과

- 계약관련 부서에 의한 **부패, 비위 등 감소**
- 시공부서, 감사부서 등 계약부서 실시간 감시효과로 **계약체결 공정성 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성공

15

제안서 평가시 시민참여단 참관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시민참여단 신청자를 참관인으로
배석시켜 제안서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추진 배경

- 제안서평가 업무의 부정청탁 등 부패위험 사전제거를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

개선 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강화, 감사인 입회 및 시민참여단 참관제도** 도입
- 제안서 평가위원회 기록(녹취록, 동영상)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공개**할 수 있도록 기록물 보관

기대 효과

- 제안서평가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부패 취약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부정·부패 위험 **선제적 차단**

성공

16

한국남동발전

납품업체 이의제기시 검수책임자 변경제도 신설

“불합격 판정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검수책임자를 변경하여 재검수 시행”

추진 배경

- 물품 검수 과정에서 2회 불합격시 재납품·계약해제 등의 결정 가능
- 재검수 과정에서 **담당자 갑질 가능성** 상존

개선 내용

- 불합격판정에 대해 납품업체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최초 검수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으로 **검수책임자를 변경하여 감사 부서 입회하여 재검수** 실시
- (기존) 재검수시 검수책임자 변경없이 납품업체에게 의견진술 기회만 부여

기대 효과

- 검수공정성 강화 및 **검수 갑질** 우려 해소, 자재 **검수 투명성** 제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성공

17

감리인 비리 예방을 위한 계약조건 강화

“감리인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리용역 계약특수조건’ 개정”

추진 배경

-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공항운영 특성상 감리용역 발주가 많아 감리인의 **비리행위 예방조치** 필요
 - 하도급사의 민원 제기로 인해 시행한 사내 특정감사에서 감리용역 업체 감리인의 **금품수수 정황** 확인

개선 내용

- 당사에서 발주하는 감리용역에 적용되는 ‘감리용역 계약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감리인의 금품 수수 등 **비리행위 원천차단**
 - 비리행위 발생시, 계약의 해지·해제 등 계약상의 즉각적인 조치
 - 향후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등 예방 조치

기대 효과

- ‘감리용역 계약특수조건’ 개정(17.10.) 이후 감리인의 부실감리 또는 감리인의 **비위행위 발생 Zero**

성공

18

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계약서 갑질관련 조항 개선

“용역계약서 내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갑질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배경

- 계약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계약관행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 부패 및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불공정 계약관계** 개선 필요

개선 내용

- 용역계약서 내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 조항 개선방안 마련
- 용역 계약부서 '갑을관계 혁신 서약' 실시 및 사무실 비치

기대 효과

- 용역사와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 형성으로 부정청탁 발생 요소 제거
- 갑을관계 혁신 서약서 비치로 외부청렴도 상승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권익위 외부청렴도	8.71(3등급)	9.01(2등급)

한전원자력연료

성공

19

수의계약 품목의 경쟁입찰 전환 확대

“기존 수의계약 대상 품목 중
경쟁입찰이 가능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쟁입찰로 전환”

추진 배경

- 계약방식(경쟁·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결정되나,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비해 **갑질 및 부정청탁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개선 내용

- 반복적으로 체결되는 유사한 성격의 수의계약 중 **경쟁입찰로 전환가능 품목 적극 지속발굴**

구분	전환발굴 품목
2017년도	77건
2018년도	32건

- 상기 품목에 대하여 경쟁입찰로 전환함으로써 수의계약 최소화

기대 효과

- **경쟁입찰 확산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성공 사례

● 제1장 성공사례

투명성 강화_ 기타 분야

한국동서발전

성공

20

익명신고자 보상제도 신설

“비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자에게
익명상태를 유지한 채 보상금 지급”

추진 배경

- 청렴도 결과,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점수 지속적 하락
-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신고 활성화 필요

개선 내용

- 익명보장 상태에서 신고자 보상 가능하도록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개선
 - 신고자만 확인·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 상품권 업로드
- 「익명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제정
 - 신고 실효성에 따라 1~5급으로 평가, 5~50만원/건 지급

기대 효과

- 보상제도 시행(2018.1.) 후 내부신고 증가

| 최근 5년간 레드휘슬을 통한 익명신고 현황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2	5	12	10	27

* 2018년 총 60만원 지급 (4급 신고건 : 각 5만원/10명, 3급 신고건 : 10만원/1명)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 제도 도입으로 신기술 채택 투명화

“공공부문 최초, 온라인을 통한 신기술 채택 신청 접수로
건설 신기술 채택과정의 투명성 강화”

추진 배경

- 신기술로 채택받기 위해 **기술보유업체의 금품, 향응제공** 사례 빈발
- ○○시 하천교량공사 특허공법 특혜 의혹, 뇌물수수 등(17. 5.)
- 신기술 도입 시 **공식적 기준 없이** 부서별 방침에 따라 폐쇄적으로 심의

개선 내용

- 건설 신기술 제안 공식접수 창구(「기술마켓」제도) 도입
 - **민간의 신기술 제안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접수**
(기존) 관련부서별 대면접수 → (변경) 공식창구 온라인 접수로 일원화
 - **3단계에 걸친 엄격한 절차를 통한 투명한 심의**(사전심의 2회, 최종심의)
 - **채택된 기술은 적극도입 및 공유**(국토부, 지자체 등)

기대 효과

- 온라인 공식 접수창구 마련으로 **부정청탁 요인 사전제거**
- 신기술 채택과정 업무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한국철도시설공단

성공

법인형 「카셰어링(Car-Sharing)」제도 도입

22

“협력사로부터 교통편의 제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카셰어링 서비스’(렌트카 업체와 시간단위 렌트 계약 체결) 도입”

추진 배경

- 당사 현장업무 특성상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많아 현장 접근 시 **협력사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가능성 상존**
- 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편의제공빈도**’ 항목 점수 저조

개선 내용

- 렌트카 업체와 **시간 단위로 렌트가 가능한 ‘카셰어링 서비스’ 계약**
- 관련사규 제정(‘법인형 카셰어링 운용지침’) 및 활용 장려

기대 효과

- 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편의제공빈도**’ 항목 **대폭 상승**
(6.23점→7.77점)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거래소

홍보성 물품 관리시스템 도입

“홍보물품 관리시스템 마련으로 구입부터 사용까지 투명성 제고”

추진 배경

- 단가 5만원 초과 홍보물품 구입 시 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존재
- 홍보물품 반출사항을 수기로 기록하여 대장관리 누락발생
- 동일제품 중복구입, 재고 허위기재 등 통제 관리에 허점 발생

개선 내용

- ‘홍보성 물품 관리시스템’ 도입
 - 단가 5만원 이하인 홍보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대금 지급 시 자동으로 부서별/품목별 관리대장 생성

기대 효과

- 5만원 초과물품 구입 제한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원천 차단
- 반출자, 사용처, 수량 관련 허위기재 사전 예방 및 실시간 재고관리 가능

성공 의 사건

제1장 성공사례 ●

청렴문화 확산_ 대내 분야

한국수자원공사

정년임박 직원 활용 「클린마스터」 제도 도입

“정년 임박한 직원 활용, 청렴교육 전담인력인 ‘클린마스터’를 선발하여 전국 사업소 청렴순회교육 전담 시행 및 교육효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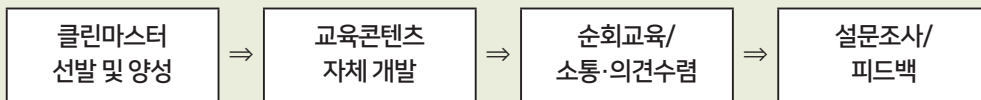
추진 배경

- 2~3명의 본사 청렴업무 담당자가 전국에 산재한 123개 사업소의 청렴교육을 전담, 청렴교육 효과 미미

개선 내용

- 임금피크(정년 임박) 직원 중 모범적이고 청렴에 대한 열의가 있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클린마스터’를 선발하여 운영

- 클린마스터 임무 : 전사업소 청렴 순회교육 및 의견수렴 전담
- 클린마스터 양성 : 전문성 함양을 위한 워크숍 및 외부전문기관 교육 수강



기대 효과

- 찾아가는 청렴 대면교육 확대를 통한 **청렴공감대 확산**, 의견수렴 활성화
- 클린마스터 청렴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이상 87%
- 임금피크 직원의 경험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부여 가능

한국남부발전

성공

25

부패사건 재판참관제도 시행

“부패사건 관련 재판에 회사 임직원을 참관시킴으로써
부패경각심 제고 및 부패발생 동기 차단”

추진 배경

- ‘부패 = 고통’이라는 마인드 확립으로 부패발생 동기 감소 필요
- 임직원 경각심 제고를 통한 유사 부패사건 발생 사전차단

개선 내용

- 부패사건 재판 시 임직원 참관제도 시행

연도	참관 횟수	장소	내용	인원
‘16년	3회	부산지방법원	관급공사 뇌물청탁 사건 등	56명
	1회	인천지방법원	공직자 횡령사건 재판	13명
‘17년	2회	부산지방법원	횡령사건 재판 등	11명
‘18년	14회	전국 6개 법원	뇌물사건 배임사건 등	171명

※ 부패공판 체험수기 우수사례 공모 및 사내 게시

기대 효과

- ‘16~‘18년 부패행위자 발생 ‘Zero’화 기여

한전KDN

「맞춤형 청렴체험 몰입교육」 시행

“청렴전문 외부연수원 활용, 전일제 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청렴교육 몰입도 향상”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 청렴컨설팅 결과에 따른 **청렴리더십 확대·강화 요구**
- 간부들의 선도적·수평적 리더십 발휘 분위기 조성 필요

개선 내용

- **청렴전문 연수원의 전일제 프로그램 참여**로 교육 몰입도 향상
 - 소통과 공감을 위한 직급별 이슈 공유 및 소통의 시간 확대
* 대상 : 간부 직원 4백여명 / 장소 : 다산수련원(전남 강진)
 - 인문학과 접목한 교육콘텐츠 활용으로 교육 수용성 확대

기대 효과

- 임직원이 느끼는 **청렴가치 및 자기성찰 등 향상** (교육효과 평가결과)

「청렴아이」 선발·운영으로 청렴문화 확산

“신입직원 중심으로 ‘청렴아이’ 선발,
뮤지컬, 연극 등을 통한 청렴교육 참여, 전사 청렴문화 확산”

추진 배경

- 주입식 청렴교육으로 인한 직원의 관심도 하락
- 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기존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방식의 청렴문화 활동 요구

개선 내용

- 입사 3년차 미만 신입직원 대상으로 ‘청렴아이’ 선발·운영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 위주 뮤지컬 및 역할극 공연
- 직원의 능동, 자발적 참여로 전사 청렴문화 확산 촉매제 역할



기대 효과

- 청렴아이 선발로 뮤지컬, 역할극 등 21회 이상 청렴관련 공연 시행
- 온라인매체 홍보강화를 통한 대외 청렴 이미지 향상

성공

28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사 청렴실천단 구성·운영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별 청렴실천단을
구성·운영하여 전사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견인”

추진 배경

- 전사 구성원의 **청렴실천 활성화**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

개선 내용

- 전국 6개 지역본부 및 178개 지사별 **청렴실천단 구성·운영**
 - 구성 : 지역본부(지사)장, 청렴도·회계담당자 등 10명 내외
 - 임무 : 청렴정책 발굴·전파, 청탁금지법 정착 및 청렴문화 확산 노력

기대 효과

- 청탁금지법 준수 및 부패신고 홍보를 통한 **청탁금지법 위반 예방**
-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활동**으로 **청렴문화 선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성공

사업소 청렴지킴이, 준(準)감사인 제도 도입

29

“본사와 사업소 간 준감사인 제도(현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를 시행하여 사업소의 자율적 자정기능 강화 및 부정리스크 제거 선제 대응”

추진 배경

- 적절한 자체감사 인력 확보의 애로 타개 및 **감사기능 효율성 확보**
 - 공사는 적정 자체감사 인력비율(0.8% 이상)에 한참 미달한 0.43%로 감사원 평가에서 준정부기관 33개 기관 중 27위로 극히 저조
- 사업소 자체감사 활성화로 **자정기능 유도 및 조직리스크 선제 대응**

개선 내용

- ‘준감사인 제도’운영
 - 전국사업소에 준감사인 60명(사업장별 1명) 위촉, 준감사인 역할수행

■ 준감사인 임무

- 자율감사 : 사업소간 릴레이식 감사 및 방만경영 예방 활동
- 청렴활동 :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 등 청렴리더
- 가교역할 : 본사와 사업소간 현장의 소리 전달 등 가교역할과 경영전반 및 반부패 청렴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등 정책제안자 역할 수행

기대 효과

- 사업소 부조리행위 사전예방 및 **방만경영 근절**
- 적정 감사인력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감사 **성과 제고**
- 사업소 자체 청렴정책 입안 및 실행으로 **사업소 자율청렴문화 정착**

도로교통공단

감사준비금 지급제도 도입

“수감부서에 종합행정감사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감사준비금 지급제도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

추진 배경

- 종합행정감사 시 과도한 비품, 다과의 구입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우려
- 청탁금지법의 준수와 종합행정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

개선 내용

- 종합행정감사 시 **수감부서의 비용집행 지원**을 위한 **감사준비금 지급 제도 도입**
- 감사실 예산으로 편성된 준비금을 감사 착수 2주 전 수감부서에 지급

기대 효과

- 감사관련 **예산기준 마련**으로 **투명성 강화** 및 **청탁금지법 위반 예방**
- 종합행정감사 **수감부서의 예산부담 경감**을 통한 **내부 만족도 제고**

한국남부발전

성공

31

청렴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




매일 3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청렴하루시스템) 운영으로 청렴 내재화

추진 배경

- 전사 청렴수준 진단 시 **임직원의 행동강령 숙지 미흡**사항 발견
- 행동강령의 철저 숙지 및 준수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도입** 필요

개선 내용

- 매일 3회(출근, 중식, 퇴근), **전 직원 참여 청렴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

출근 직후	중식 시간	퇴근 직전
		
행동강령 따라 쓰기	부패·공익신고 숙지	행동강령 준수 확인

기대 효과

-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반부패·청렴의식 제고

한국서부발전

부당업무지시 사례집 발간

“조직 내 문화적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하급자 관점의 부당업무지시 사례 공유 및 신고센터 운영”

추진 배경

- 대기업 오너의 갑질사건 등 공공·민간분야 갑질이슈 지속 발생
- 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업무지시 공정성 점수 지속 하락
- 갑질·부당업무 판단기준 제시로 상하간 윤리적 갈등 사전 예방

개선 내용

- 공정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하급자 관점의 ‘부당업무지시 사례집’ 발간
- 부당업무 판단기준 및 업무시간 외 SNS를 통한 지시 등 30개 사례 제시
- 전 직원 대상 현장교육 시행, 부당업무지시 신고센터 운영
※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10대 반부패 우수시책 선정

기대 효과

- 상하간 갑질·부당업무에 대한 청렴공감대 형성
- 유사사례 재발방지로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 청렴문화 확산

한국항공공사

성공

33

간부급 도덕성 검증·청렴사직 서약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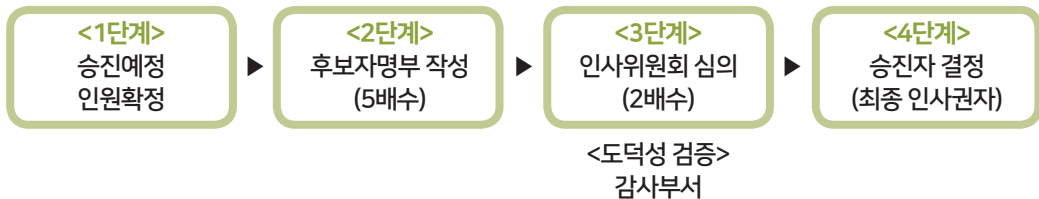
“간부급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고,
간부 임직원에게는 청렴사직 서약제도를 운영”

추진 배경

- 부패인식 및 경험 조사결과 고위 임직원을 부패유발 주체로 지목
- 고위직 임직원은 公社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재량과 권한이 많아 높은 잣대의 청렴 및 윤리성이 요구됨

개선 내용

- 도덕성 검증제도 운영



- 청렴사직 서약제도 운영

- CEO를 포함한 **소 간부 임·직원이 청렴사직 서약서를 작성**하여 감사실로 원본을 제출, 결의대회 등을 통해 청렴사직 서약 실시

기대 효과

-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그 영향력 및 파급력으로 인해 **전사적인 청렴 조직문화로 확산**

성공 의 사건

● 제1장 성공사례

청렴문화 확산_ 대외 분야

한국전력공사

성공

34

우수협력사 선정 시 청렴성 평가 도입

“우수협력사 선정 시 부정당제재 이력 회사는
배제하고, 청렴교육을 이수한 경우 평가가점 부여”

추진 배경

- 협력회사 직원의 청탁금지법 이해 부족으로 위반사례 지속 발생
-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협력회사의 청렴성 유도 필요

개선 내용

- 우수협력사 선정 시 청렴성부문 평가 신설 (자발적 청렴문화 유도)

구분	기존	개선
청렴부문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능력만 평가 • 제재 이력 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 직원의 청렴교육 수강 시 가점 부여 • 5년간 부정당제재 이력있는 회사 선정 제외

※ 우수협력사 인센티브 : 한전 사장명의 인증서 수여, 시공능력 평가 시 가점 등

기대 효과

- 우수협력사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2018년 권익위 청렴문화확산 우수사례로 선정

성공

한국동서발전

협력회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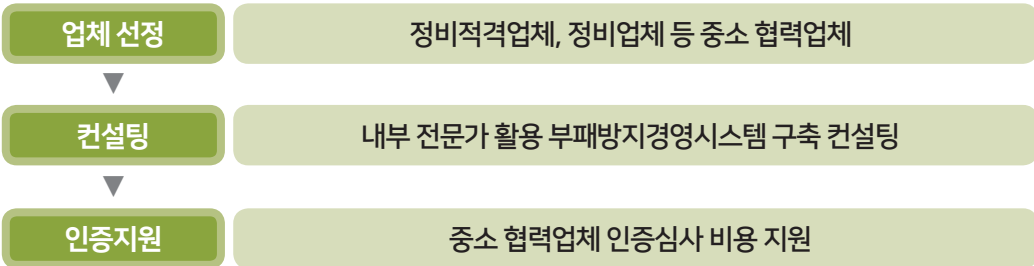
“협력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인증비용 지원”

추진 배경

- 협력회사의 반부패 인식 및 시스템 미흡으로 **부패리스크 상존**
- **ISO 37001 인증** 지원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필요
※ 당사 ISO 37001 인증 획득 : 2017. 8. 10

개선 내용

- 주요 협력회사 대상 **ISO37001 인증획득 지원** 시행



기대 효과

- **협력회사의 반부패** 인식제고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패 예방**
- 파워닉스 등 **8개 협력회사 인증 획득**

반부패 청렴 ACADEMY 투어 운영

“소속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직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반부패 청렴교육 시행”

추진 배경

- 광역 이해관계자 초청 **반부패 청렴교육** 사각지대 해소
- 사회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공공성 확보

개선 내용

- **지역주민/이해관계자와 청렴문화 확산** 사옥방문 프로그램 개발
- 공공기관의 우수한 청렴윤리 **시설물/청렴활동 견학기회** 제공
- 참여대상에 따라 **반부패 청렴윤리 프로그램** 등 선별적 연계

기대 효과

- 정부/공공기관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이해**와 이질간극 해소
-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청렴활동을 시행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콘텐츠 공모대회 개최

“직원가족 및 지역 초등학교 학생 대상
청렴콘텐츠 공모대회를 시행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추진 배경

- 임직원의 반부패 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개선 내용

-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 16개 기관 통합 청렴콘텐츠 공모대회 개최
- 2018년 공모전 작품제출 현황

구분	임직원	직원가족			초등학교	합계
		성인부	중고등부	초등부		
작품수	977	14	6	24	46	1,067

기대 효과

- 청렴콘텐츠 공모참여 기회제공으로 청렴의식 DNA 정착 유도
- 청렴콘텐츠 입상 작품 전시를 통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기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성공

38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서약실 운영

“고객 접견실, 회의실 등을
청렴서약실로 운영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의 청렴콘텐츠를 자연스럽게 노출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개선 내용

- 직원 및 일반 시민 대상 **반부패·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렴서약실 제도** 도입 및 **운영**

- 고객 접견실 및 회의실에 청렴 표어, 포스터, 자체 **청렴콘텐츠** 수상작 등 **게시**
- 외부 고객 및 내부 직원의 청렴서약실 이용 시 **청렴정책 상시 홍보**

기대 효과

- 공공기관의 **청렴문화**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여 청렴사회 구현에 기여

한국공항공사

39 직무관련자 청렴식권 제도 운영

“직무관련자와 부득이 식사를 같이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청렴식권 제도 운영”

추진 배경

- 직무관련자와 업무수행 중 동행식사 시 **식사비 대납** 등 **부패요인** 상존
- **공정한 업무처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개선 내용

● 청렴식권제도 도입

-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직무관련자와 업무처리 중 불가피하게 식사가 필요할 때 사용
- 본사/사업소 행동강령책임자가 식권지급 및 관리업무 총괄

● 청렴식권 제도 운영 현황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사용인원	금액	사용인원	금액	사용인원	금액
사용실적	1,089명	3,830천원	952명	3,676천원	850명	3,444천원

기대 효과

- 직무관련자와 동행식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 사전 차단**

실패 사례

제2장 실패사례 ●

견제장치 미흡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불법 승인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 권한이 한명의 담당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담당자가 불법으로 양도승인”

현황 및 취약점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하나,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의 심사 후 양도 가능
- 양도심사업무 전체(신청접수, 서류심사, 실태조사, 승인 등)를 직원 한명이 담당함으로써, 심사업무담당자가 신청자와 유착할 경우 양도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 양도승인 가능성 상존

실제 사례

- 부동산중개업자(브로커) A는 임차권 양도조건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성립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품과 함께 심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하였으며, 심사업무담당자는 금품을 받고 불법으로 임차권 양도를 승인한 사례 발생

개선 사항

- 양도심사업무 담당자 권한 분산(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담당자 분리)
- 양도심사업무 전과정 전산화 및 사후점검 강화

단기계약근로자 근태 허위기록 및 임금 과다지급

실패

02

“수기 출근부에 의존한 근태관리를 악용하여
출근일수를 임의 조정하여 임금 과다 지급”

현황 및 취약점

- 오지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직 단기계약근로자**는 **출근부 수기서명**으로 근태를 관리하고 있고, 해당 **출근일수에 근거하여 급여 지급**
- 수기 출근부의 경우 근태관리담당자와 근로자가 유착할 경우 조작이 용이하여 **부패가능성 상존**

실제 사례

- 근태관리담당자 A는 現 노임단가로는 오지 근무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기계약 근로자의 **출근부에 허위로 서명**하는 등 **출근일수를 임의로 조정하여 임금을 부풀려 지급**

개선 사항

- 오지 근무자 노임단가 현실화
- 지문인식 및 타임스탬프(時刻 연동) 카메라 App을 활용한 사진촬영 의무화 등 **근태관리 시스템화**로 근무일수 임의조정 가능성 사전 차단

거래처에 회사 공인인증서 무단유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게 회사 공인인증서를 무단 유출하여
업체가 대신 실적을 입력토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지급”

현황 및 취약점

- ○○○사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제출하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후 처리비용 지급
- 건설폐기물 담당자가 업체와 유착할 경우 처리실적을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조작 개연성 상존**

실제 사례

- 건설폐기물 담당자가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에 넘겨주고** 처리실적을 대신 입력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비용 과다 지급**
- 최근 4년간 당사에서 시행한 59건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중 49건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됨

개선 사항

- 공인인증서 대행입력 방지를 위한 **배출자·처리자 동일 IP 입력 차단**
- 폐기물처리업체 처리실적 계량치 자동 전송·입력 등 **시스템 개선**

응급관리료 임의 취소 및 횡령

“응급실 야간 수납담당자가 환자로부터 받은
응급관리료를 임의로 취소한 후 환불금을 횡령”

현황 및 취약점

- 야간 응급실 환자 내원 시 응급환자 여부에 따라 응급관리료 발생
- 응급환자 여부 및 응급관리료 부과 취소 여부를 수납담당자가 결정
- 야간, 휴일 등 관리감독자가 없는 경우 응급관리료 횡령 가능성 상존

실제 사례

- 응급실 수납담당자 A가 환자 귀가후 최초 부과했던 응급관리료를 임의로 취소한 후 환불금을 발생시켜 횡령

개선 사항

- 응급환자 여부 및 응급관리료 부과 판정권한을 의료진에 부여
- 응급관리료 부과 취소 등 환불금 관리를 위한 수납시스템 개선

사내 사회공헌활동기금 횡령

“기금집행 모니터링 부재 및 관리자 점검 미흡으로 인해
사회공헌활동기금 횡령”

현황 및 취약점

- ○○○사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기금’ 운영중
- 모금된 기금은 별도의 회계관리시스템 없이 기금담당자가 현금으로 전불하여 사용 및 정산
- ‘기금은 좋은 일에 쓰인다’는 대다수의 인식으로 인해 기금사용에 대해 감사 또는 관리자 점검 등 모니터링 미미

실제 사례

- 기금담당자 A가 기금에 대한 모니터링이 허술함을 인지하고 기금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임의 이체하여 사용하는 횡령사건 발생

개선 사항

- 임직원 참여기금 정산 및 자체점검 기준 명확화
-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 외부공개 의무화

소액물품구매제도 악용 허위 물품구매 및 횡령

실패

06

“소액물품 사용부서 직접 구매제도 악용,
구매계획 대비 저가 물품 구입 후 차액 횡령”

현황 및 취약점

-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물품의 경우 계약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사용부서에서 자체구매** 가능
- 사용부서 구매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이 없고**, 사용부서장도 **서류상으로만 물품을 확인·결재**하는 등 관리 허술

실제 사례

- 구매계획부터 검수까지 **구매 수단계를 한 두명이 전담**하는 점을 악용, 계획상의 물품과 상이한(저가) 물품을 구입 후 **차액 횡령**

개선 사항

- 사용부서 자체구매 시 **구매(사용)자와 검사(검수)자 분리 지정**
- **100만원 이상** 구매건은 **사용부서장 직접 검수 입회** 또는 입회자 지정
- 물품취득 통제 및 사후 확인 강화

정보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데이터 변조

“중요 데이터 접근권한 통제장치 부재로 전자문서 위·변조”

현황 및 취약점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이 부여된 관리부서 직원은 데이터의 수정, 삭제 등의 권한까지 모두 보유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해 접근기록은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데이터 수정 내역기록은 관리되지 않아 악의적인 데이터 수정 가능

실제 사례

- 정보시스템 관리부서 직원 A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교육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여 **자신의 이러닝 교육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례 발생**

개선 사항

- 정보시스템 접속 시 **통제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
 - 정보시스템 권한 부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명시, 담당자 책임 명확화
 - 정기적으로 정보시스템 권한 부여에 대한 타당성 점검

실패 사례

제2장 실패사례 ●

모니터링 부실

안전관리비 증빙 확인절차 미흡

“안전관리비 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확인절차 부재로 안전관리비가 부당하게 청구되어 지급”

현황 및 취약점

- ○○○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급 적정성 확인 후 대금 지급
-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 집행 증빙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취소 처리**하거나, **금액을 변경**하여 **수정발급** 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확인 곤란
- 취소 후 재발급 시에는 **대금 중복지급 리스크** 상존

실제 사례

- 계약상대자 A업체는 안전관리비 증빙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금 수령 후, **기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취소**하여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수령**

개선 사항

- 안전보건관리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확인절차 의무화**
- **국세청(홈택스)의 증빙자료 첨부** 시 지급되도록 **업무시스템 개선**

간부승진시험 자격 서류 위변조

“간부승진시험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위조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승진시험에 4차례나 응시”

현황 및 취약점

- 간부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직원은 한국사능력검증시험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하여 승진업무 주관부서에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 승진업무 주관부서는 승진시험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응시단계의 증빙서류 위조 가능성** 존재

실제 사례

- 간부승진시험 응시자 A는 필수자격인 한국사능력검증시험 **자격증을 위조**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시험에 4차례나 응시

개선 사항

- 간부승진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증빙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 개선

단시간근로 무기계약직 채용기준 부재

“단시간근로 무기계약직 채용시 서류심사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면접심사 관련서류 보관을 소홀히 하는 등 전반적인 채용투명성 저조”

현황 및 취약점

- ○○○사는 사업특성상 비정규직 단시간근로 무기계약직을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으나, 단시간근로 무기계약직 채용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기준 부재**

실제 사례

- 서류심사시 채용담당자는 연령미달 등으로 인한 채용불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격 처리**
- 면접심사시 채점표를 보관하지 않거나 면접위원 성명을 기록하지 않는 등 **심사업무 소홀**
- 채용기준 미비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개선권고** 받음

개선 사항

- 합리적인 서류심사 기준 마련 및 면접심사 운영관리 강화

업무 세부기준 부재로 위험수당 부당수령

“위험수당 지급대상여부 확인절차 및 지급기준 부재로
미자격자가 위험수당 부당수령”

현황 및 취약점

- ○○○사는 개별 위험업무 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위험업무 해당 부서의 모든 직원에게 위험수당 지급 중
- 위험수당 지급 세부기준 및 확인절차 부재로 부당지급 개연성 상존

실제 사례

- 위험업무 담당부서 직원 중 일부의 경우 상시적으로 위험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위험수당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 발생

개선 사항

- 상시적·직접적 위험업무 종사자 인정기준 규정화
- 위험수당 관리 전산화로 수당지급 대상여부 확인 절차 개선

출산장려금 관리시스템 부재로 중복지급

“출산장려금 지급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
중복 신청 및 수혜직원 발생”

현황 및 취약점

- ○○○사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둘째 자녀 출산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중
- 출산장려금은 해당 직원의 신청에 따라 지사별 담당 직원이 검토 후 지급하고 있으나, **과거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실제 사례

- 직원 8명은 출산장려금을 **기 지급받았음**에도 다른 지사로 인사이동 후 **다시 신청**하였으며, **출산장려금 담당 직원**은 시스템 부재로 인해 기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급승인하여 **중복지급 발생**

개선 사항

- 출산장려금 **중복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해외출자회사 비용집행 규정 및 관리 미흡

“해외출자회사의 경우 대관업무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타 비용 지급 시에도 증빙관리가 미흡하여 금전사고 발생 우려”

현황 및 취약점

- ○○○사는 해외 현지 출자회사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재무관리에 자율성 부여 중
- 해외출자회사의 대관업무 비용집행 관련 규정 및 관리체계 부재

실제 사례

- 현지 인허가 업무 등 대관업무 수행 시 해당 비용을 현금 지급
⇒ 금전사고 발생 우려
- 해외출자회사 근무 직원에게 출장비,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지급 시 영수증 또는 수령확인 서류 등 적정 증빙서류 수취 없이 지급

개선 사항

- 해외출자회사 자금집행 시 증빙관련 규정 마련 및 증빙수취 강화
- 현금 지급 시 현금집행대장 운영 및 세부내역 증빙자료 보관 철저

휴면계좌 해지 소홀로 인한 잔액 방치

“휴면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로
휴면계좌 예치잔액 유용 가능성 상존”

현황 및 취약점

- 부서 폐지 등 은행계좌의 사용목적 소멸 시에는 사용 중인 계좌를 즉시 해지하여야 하나, 대부분 부서에서 기존계좌 해지업무 소홀
- 또한, 해지대상 계좌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가 없어 해지계좌 잔액이 유용될 가능성 상존

실제 사례

- 내부감사 결과, 본사 및 전 본부 법인명의 개설계좌 292개 중 조직·부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인한 76개의 휴면계좌에서 2,484천원의 예치잔액 발생 및 회사 미귀속

개선 사항

- 계좌 개설 뿐 아니라 해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발명 기여율 임의 기재로 보상금 부당수령

“실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발명기여율을 산정하여 보상금 수령”

현황 및 취약점

- 직무발명 시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
- 특정 발명에 대해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별 기여내용을 기재하고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 지급**
- 기여율 산정 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큼

실제 사례

-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상급자**가 명확한 근거없이 **임의로 기여율을 기재하여 보상금 부당 수령** (2018년 총 발명 건수의 약 65%에 해당)

개선 사항

- 각 발명자가 **본인의 기여내역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명신고서 개선**

실패 사례

● 제2장 실패사례

제도 부작용 발생

자체청렴도 내부평가 경쟁 과열

실패

16

“회사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하던
자체청렴도 조사의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제도 폐지”

현황 및 취약점

- ○○○사는 회사 청렴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년부터 당사와 접촉한 고객이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시행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조사하는 **자체청렴도 조사 제도를 운영**
-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는 각 지사 **성과평가에 반영**
- 각 지사에서는 조사대상 협력회사를 사전에 접촉하여 호의적 답변을 유도하거나, 비우호적인 고객의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한 편법들이 난무**

실제 사례

- 일부 **협력회사**는 자체청렴도 조사에 대한 **우호적 응답을 미끼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 속출
- 직원들은 고객성향 분석 및 우호답변 유도 등 자체청렴도 조사로 인한 **부가업무 증가**로 피로도 누적 호소, 급기야 언론 제보까지 이룸

개선 사항

- 자체청렴도 **조사제도 폐지**
- 기본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평가지표 개선**

법인카드 부정사용방지 대책 미흡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던 내부평가 제도의 부작용 사례 속출”

현황 및 취약점

- 업무추진비 관련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지속 발생
-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부적정 적발 건수 내부평가에 반영**

실제 사례

- 내부평가 감점 회피를 위한 **봐주기 식 점검**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
- 일정 금액 이하로 분할 후 카드 결제 등 **편법 난무**로 **실효성 저하**
- 부적정 적발 건 삭제요구 등 **부작용 사례** 속출로 직원들의 불만 가중

개선 사항

-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전담조직 운영
- 고위직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관련 **청렴 의무교육 강화**

건설현장 식당 선정 시 발주처 이권 개입

실패

18

“건설현장 식당업체 선정과정 중
발주처 임직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 발생”

현황 및 취약점

- 건설현장 식당업체는 시공사와 식당업체간 사적계약을 통해 선정되며, **식당업체 선정 시 발주처 승인 필요**
- 식당업체 선정 승인 시 발주처 **임직원의 이권개입 가능성** 상존
- 현장식당은 독점운영으로 고수익이 발생하므로 **운영권 획득경쟁 치열**

실제 사례

-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업체 선정 시 식당운영권 부여를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발주처와 시공사 간부 적발

개선 사항

- 건설현장내 식당 운영 **원칙적 금지**
- 건설현장 내 식당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식당업체의 입찰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발주처 **임직원의 이권개입 가능성을 원천 봉쇄**

직무관련자 접촉 자율신고제 운영 미흡

“일과 후 직무관련자와 접촉 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실효성 미흡”

현황 및 취약점

-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와 접촉 시 **자율신고 조항** 신설
- 자율신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청렴방명록 시스템** 운영

실제 사례

- 청렴방명록 시스템에 대한 **직원 인식도**가 낮아 **신고실적 저조**
- 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일부 사업소에서 **항응수수 사례** 발생

개선 사항

- 직무관련자 사전 접촉 시 **의무신고제도 도입** (미신고 시 신분조치)
- 청렴방명록 **시스템 적극 홍보** 및 사적 접촉 **모니터링 강화**

반부패시민감시단 제도 폐지

“지역인사로 구성된 반부패시민감시단을 구성하였으나, 전문성 부족 및 유사 성격의 기구와 기능중복으로 제도 폐지”

현황 및 취약점

- 회사 내 부조리, 회계부정 등 **비리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 지역 언론인, 군의원 등 지역인사로 구성된 **반부패시민감시단 운영**

실제 사례

- 반부패시민감시단 **위원들의 제도운영관련 관심 및 전문성 부족**
- 유사성격의 기존 기구들과 구성원 및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 저조**

개선 사항

- 반부패 시민감시단 **제도 폐지**
- 유사성격의 기존 기구들과 **통합 후 기능 보완**을 통한 **제도 개선**

| 참고 |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회원사 현황 (‘19.7. 현재)

(가나다순)

연번	기관명	본점 소재지	대표 (협의회위원)	비고
1	(주)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문태곤	
2	국립공원공단	강원도 원주시	권경업	
3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김용익	
4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 송파구	조재기	
5	그랜드코리아레저	서울시 강남구	유태열	2019. 7. 신규가입
6	대한적십자사	서울시 중구	박경서	
7	도로교통공단	강원도 원주시	윤종기	
8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성동구	조성일	
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중구	구분환	
10	한국가스공사	대구시 동구	김영두	
11	한국거래소	부산시 남구	정지원	
12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김명운	
13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북 김천시	권병운	
14	한국남동발전(주)	경남 진주시	유향열	
15	한국남부발전(주)	부산시 남구	신정식	
16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이강래	
17	한국동서발전(주)	울산시 중구	박일준	
18	한국마사회	경기도 과천시	김낙순	

연번	기관명	본점 소재지	대표 (협의회위원)	비고
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강원도 원주시	양봉민	
20	한국서부발전(주)	충남 태안군	김병숙	
21	한국수력원자력	경북 경주시	정재훈	
2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이학수	
2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남 진주시	김영기	
24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 완주군	조성완	
25	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시	김종갑	의장사
26	한국전력기술(주)	경북 김천시	이배수	
2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시 유성구	김명준	
28	한국중부발전(주)	충남 보령시	박형구	
29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도 성남시	황창화	
30	한국철도공사	대전시 동구	손병석	
31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시 동구	김상균	
3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변창흠	
33	한국환경공단	인천시 서구	장준영	
34	한전원자력연료	대전시 유성구	정상봉	
35	한전KDN	전남 나주시	박성철	
36	한전KPS	전남 나주시	김범년	

공기업 청렴사회협약

전 문

그동안 공기업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공기업의 국가발전 기여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질, 채용비리, 금품수수, 청탁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부패취약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등 공기업의 청렴실천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공기업은 공정과 신뢰가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이며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만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기업 공동의 청렴실천을 위하여 2018.11.15. 체결한 ‘공기업 청렴실천협약’을 구체화하여 ‘공기업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공기업 청렴사회 협약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기업을 만들어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 나아가 사회 전역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국가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협의회”라 함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 직능분야 협의회로 2018.11.15. 발족한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를 말한다.
2. “실무협의회”라 함은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하위기구인 ‘공기업 청렴사회실무협의회’를 말한다.

3. “회원사”라 함은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가입 회원사를 말한다.
4. “협약체결당사자”라 함은 본 협약을 체결하는 협의회 가입 회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의 적용범위는 협의회 가입 회원사로 한다.

제4조(협약체결당사자의 책무) 협약체결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각 회원사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 장 윤리 · 청렴 경영

제5조(이해충돌 방지) 회원사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회피 또는 제척하도록 한다.
2.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 대해 노무, 조언, 자문을 제공후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3. 임원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거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본인,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한다.
4. 기타 각 회원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사규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회원사는 임직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1. 인가 · 허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 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7조(직원윤리 강화) 회원사는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시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시나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기타 각 회원사의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청렴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행동강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한다.

제8조(청렴교육 강화) 회원사는 직원 및 산하기관의 반부패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제9조(사회적 책임) 회원사는 일자리 창출, 불우이웃돕기 등 소외계층지원, 재난구호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 3 장 투명경영

제10조(투명경영을 위한 노력) 회원사는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불투명성, 정보공개 거부, 잘못된 회계 관행 등이 공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11조(업무처리 과정 투명성 제고) 회원사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이 부당하게 남용되어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체진단 및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공개) 회원사는 언론 및 일반국민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대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에 노력한다.

제13조(투명한 회계처리) 회원사는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업무 수행시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한다.

제 4 장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제14조(부패방지 체계 개선) 회원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패현상 발생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 시스템을 운영한다.
2. 부패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4.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제15조(청렴도 제고) 회원사는 금품, 접대 안받기, 청탁 안하고 안받기,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부패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회원사의 부패척결에 노력한다.
2. 회원사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개인/단체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6조(청렴정책 공유) 회원사는 각 사의 청렴정책에 대한 회원사간 공유를 강화하며 필요시 외부에 공개하여 국가 전체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제 5 장 청렴협약 이행

제17조(협약회의의 임무)

- ① 협약회는 협약체결당사자들 간의 협력수준을 높이고 협약이행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② 협약이행과 관련된 점검·평가·확산 등의 세부사항은 실무협약회에 위임한다.
- ③ 협약회는 청렴사회민관협약회와 추진사항 등을 필요시 협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18조(신규회원사 협약체결) 공기업 청렴사회협약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기관은 협약회 가입승인과 동시에 본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협약의 보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 체결 후 협약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회의 의결로 협약을 수정 보완한다.

부 칙 (2019.7.19.)

(발효시기)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발효된다.

(공기업 청렴실천협약과의 관계)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2018.11.15. 공기업 청렴사회협약회에서 체결한 '공기업 청렴실천협약'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안전하게 보



신고자

보호 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https://1398.acrc.go.kr>)의 |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47~8(부패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호해 드립니다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억 원 지급)

신고자
보상
제도

‘제도안내→보호·보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743~5(부패신고자 보상)



부패행위란?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1,2와 같은 행위나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란?

1.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공직자 및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3.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하는 방법

인 터 넷 1398.acrc.go.kr

팩 스 044-200-7972

우편·방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

인쇄일 _ 2019년 07월

발행일 _ 2019년 07월

발행처 _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인쇄처 _ 수커뮤니케이션즈

본 책자 내용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